

역량의 퀀텀 점프

선거법, 모르면 독 되고 알면 득 된다

선거운동 · 공보물 · 현장행사 운영 시 실무 유의사항

강연 핵심안내

필수 확인사항

주체



누가 행위자인지에 따라 규제 상이

시기



선거운동기간 전/중 적용 기준의 변화

방법



말, 문자, 명함 등 수단별 상세규정

사전확인



모호한 사안은 관할 선관위 질의

자격 기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일반)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지방선거 선거권 인정 외국인은 별도 확인)
- **미성년자**
(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에서 정한 예외 제외)

확인할 사항

선거운동 가능 여부는
신분, 직업, 법상 지위,
정당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

자격 기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② (공공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조합

- 각급 선관위 위원 및 공무원 신분
-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상근 임원
- 농협·수협·산림조합 상근 임직원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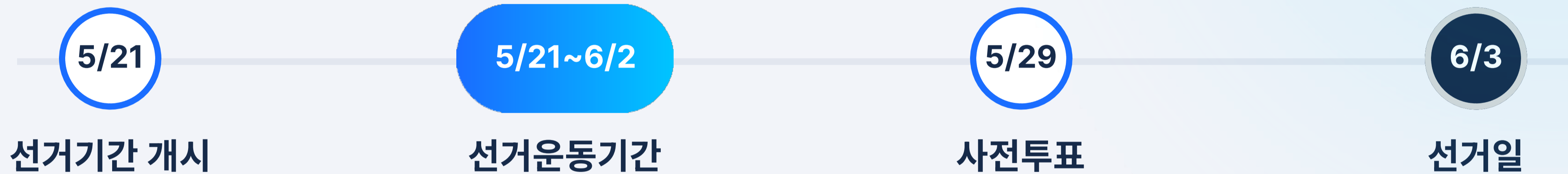
직능/단체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새마을·자유총연맹 상근진
- 선상투표신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

 실무상 유의사항: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는 경우 사직 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026. 3. 5. 기준 90일 규정 주의)

일정 및 원칙

선거운동기간과 기본 원칙



기간 전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방식**만 허용됩니다.
※ 단순한 언동이라도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일

기간 중엔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선거일엔 제한이 **가장 강하게 적용**됩니다.

법적 해석 가이드

가능 · 금지 판단 기준

공공기관/조합

- 누가 했는가
- 언제 했는가
- 어디서 했는가
-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 **행위의 중심이 선거운동에 있었는가**

위반 우려가 큰 경우

- 다중을 상대로 한 지지호소
- **확성장치 사용**
- 행사 형식을 빌린 실질적 선거운동
- 다른 후보 지지·연대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

 정당 또는 단체의 가능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현장 활동 가이드

민생행보와 여론수렴 (가능 사례)

"민원 청취와 현장 의견 수렴 자체는 가능"

현장 행보

- 기관·단체·시설·민생현장 민원 청취
- 민원 관련 정책이나 대안 설명
- 시장·산업현장·복지시설 통상적 체험
- 정책 준비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행사 참석

- 초청받은 행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
- 행사 주제와 관련한 견해 표명
-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

※ 다만,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사 본래 목적보다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

현장 활동 가이드

민생행보도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

주요 위반 사례

-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중 지지 호소
- 선거공약 발표가 중심이 되는 옥외집회
- 주민간담회 형식을 빌린 사실상 선거운동
- **공무원 사무실 등을 돌며** 개별 지지 요청



확성장치 사용

위반 판단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중 상대 호소

개별 인사 수준을 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행사보다 선거운동

행사 명목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행사의 명칭보다 실제 진행 내용이 판단 기준

인쇄물/소품

후보자 명함

가능 사례

- 선거대책기구 상근자가 직위 명함 수교
- 명함 귀퉁이에 **QR코드** 삽입
-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의 통상적 수교

주의 및 금지 사례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 없이 단독 배부**
- 연설·대담차량 주변 별도 대량 배부
- 과장된 경력, 실제와 다른 직함 기재

명함은 배부 방식뿐 아니라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함께 판단**

인쇄물/소품

선거벽보 제작 가이드

표현 가능

- 뒷모습
- 손가락 사진
- 캐리커처
- 복수 사진
- QR/NFC 삽입

유의사항

- 학교명 변경 시 당시/현재 학교명 병기
- 학력/경력 사실 그대로 기재
- 객관적 근거를 둔 지지·연대 표현

주의/금지

- 정규학력을 '독학' 표기
- '국제변호사' 오인 표현
- 어린이 동반 사진
- 객관적 근거 없는 단일후보 명칭

벽보 문구 한 줄도 **허위사실공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공식 문서

선거공보 ① 기본 원칙

- 과거 활동사진 등 사실관계에 맞으면 기재 가능
- 선거운동 제한자와의 과거 사진도 가능할 수 있음
- 학점인정제 학위 등은 법정 방식 표기

단체장 후보자 필수 확인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공보는 공식 문서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름

정보공개자료 관리

축약이나 미화 없이 원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공식 문서

선거공보 ② 주요 위반 포인트

경력·학력·재산·채납·전과·연대 표현은 허위사실공표와 직접 연결

검증 항목	주요 위반 및 주의 사례
경력/학력	실제와 다른 직함, 유사학력 오인 표기, 예산 '확보' 허위 기재, 원격과정 누락 표기
재산/전과	재산·채무 누락, 체납액 누계 오기 또는 누락, 전과기록 및 선고형 확정일자 누락
연대표현	실제 합의/연대하지 않았음에도 '정책연대'라고 기재하는 행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원문 기준으로 교차 확인

인쇄물/소품

선거공약서 작성 가이드

배부 가능 사례

- 이메일 선거운동정보와 함께 발송
- 허용 주체가 우편함 투입 방식으로 배부

유의 및 금지사항

- 타 후보자나 정당 비방 내용 기재 금지
- 과장된 자원 조달 방안, 허위 연대 표현 위험
- 공약서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공약 문구는 실현 가능성보다 **표현의 적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함

시설물

거리게시 현수막

허용 방식

- 같은 크기·도안 현수막 양면 사용
- 장소 이동 게시
- 법정수량 내 집중 게시
- 전기모터 상하 이동 형태

주의 및 게시 금지

- **사전투표소 100m 이내 이동 게시**
- 선거일 이동 / 게시한 채로 이동
- 도로 가로지르기 방식
- 비닐 등 천이 아닌 재질 사용

게시 장소와 방식은 관할 선관위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현장 유세

공개장소 연설·대담 ① 허용 범위

- 유세 차량에 정견·정책·구호 표시 가능
- 후보자 활동내용 녹화물 방영 가능
- **전문성우 음성 녹음물** 활용 가능
- 차량 이동 중 연설 가능
- 자발적 로고송 및 율동 가능

문자 발송 시 필수 확인

발신 주체, 자동동보 여부, 표시사항 충족 여부



현장 유세

공개장소 연설·대담 ② 금지 사례

주요 위반 사례 (현장 관행보다 법 기준 우선)

- 연설자 없이 녹화물만 상영
- 비정규학력 녹화물 방영
- 허용된 확장장치 외 별도 추가 설치
- 투표소 주차 유세차량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미성년자 연설 동원

여론조사 관련: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제한됨

디지털/기술

AI · 영상 · QR 사용 유의사항

QR / 링크



연결된 영상·이미지에도
공직선거법이 동일 적용

AI 생성 콘텐츠



연결된 영상·이미지에도
공직선거법이 동일 적용

딥페이크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
(제작·유포·상영·게시 불가)

'링크만 넣었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유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

최종 점검

최종 체크리스트

- 선거운동 가능한 신분/시기인가?
- 의례적 범위를 넘지 않았는가?
- 명함·공보·벽보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 재산/체납/전과 누락이나 생략은 없는가?
- AI/영상 제한사항을 확인했는가?

가장 안전한 판단 기준

관할 선관위 사전 문의

캠프의 관행보다 법적 해석이 우선

Q&A

질의응답